

1998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韓國教育開發院·韓國教育放送院

日時 1998年11月10日(火)
場所 韓國教育開發院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韓國教育開發院 副院長 鄭柄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鄭喜卿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연구원이 교육현장에서 상주하며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KEDI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 변)

주지하다시피, 내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다소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교육현장에 상주·파견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렇게 할 경우 요구되는 많은 연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원에서는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학교현장의 실상을 연구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자율근무제도를 운영함으로써(주 8시간씩) 연구직원이 자유로이 학교현장을 방문·탐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현장교사 및 관계자들의 연구참여를 추진하는 등 교육현장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金許男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대상국가를 제3세계 국가로 확대할 계획과 대한민국 영토 표시가 된 세부전도를 함께 홍보할 계획은 없는가?

(답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왜곡된 내용이 많은 부분 개선,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은 주로 구미 및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일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확대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권 국가들에 대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3세계 언어를 습득한 고급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표기하고, 독도와 동해지역이 우리 영역으로 확정된 세부 전도도 함께 제작하여 전 세계에 홍보·배포하는 문제 등을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한국교육의 비교우위 연구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분야를 선정하여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육성 방향은 무엇인가?

(답 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육성정책 연구, 유아교육 의무화방안 연구, 교육개혁 저해요인 연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아 교육복지 대책, 유아교육 의무화 대책 등 국가 교육발전방안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열악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도 장기적인 교육대책으로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다. 최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실업자 재교육 체계 확립방안, 특수교육의 정책적인 육성 방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과제를 선정·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연연구기관법”에 의해 5개 연합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 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KEDI는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게 되어 있으나, 이 연구회에 10여개 연구기관이 소속되는 것으로 성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사회 및 이사회의 사무국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관한 세부계획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합이사회내에서 어느 한 출연연구기관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방안을 강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교육관련 연구기관이 모두 소속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부분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법안의 진행과정을 고찰하면서 KEDI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청사확보 문제와 관계된 교육방송원과의 갈등 해결방안은?

(답 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방송원은 청사신축과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지내에 청사신축과 토지, 건물, 시설 등 재산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1997년6월5일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 청사신축

한국교육방송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지내 건평 3,500평 규모의 청사를 2001년까지 신축하여 완공 후에 한국교육개발원 소유의 건물 중 방송동 및 신관 건물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 토지분할

신축청사 완공 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토지 중 한국교육방송원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국교육방송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 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실태와 발전계획은?

(답 변)

1)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지금까지의 활동내용

1982년 본원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외국의 교과서 시정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 교과서 검토·분석량 - 49개국 915책
- 연구보고서 발행 - 48권
- 각국 현지어판 시정자료집 개발 : 총 23종 개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학술토론회 개최 - 21회 : 국제 학술회의 참여 - 12회
- 외국인의 국내 견학 : 21회 : 외국인 연수 - 11회
- 한국 소개 도서 개발 및 기증
 - Teaching About Korea(교수-학습 자료, 1986) - 1,500부
 - KOREA - Geographical Perspectives(1987) - 1,000부
 - A Brief History of Korea(1994) - 300부
 - Geography of Korea(1995) - 700부
 - 한국 관련 오류 무엇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FACTS AND FALLACIES ABOUT KOREA)(1998) - 2,000부
 - 한국 소개 도서 구입 기증 : 14종 948권
- 기타 활동
 -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1983) - 2종
 - 미국 워싱턴 교육방송(WDCA)에 출연 홍보(1984) - 1회
 - 외국의 학술지에 한국 종합소개 (The Social Studies - Focus on South Korea)(1998) - 1회
- 외국문헌 분석 연구 및 시정 자료집 개발
 - 『중국문헌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보고서 간행(1994)
 - 중국문헌의 한국관련내용 시정 자료집 개발(1996)
 - 『러시아의 한국관련 문헌의 내용 분석』(1996)
 - 『동구권 국가들의 문헌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분석』(1996)

2) 교과서 시정을 위한 국제 공공기구와의 상호연구 협력

①일본과의 협력 : 「국제교육정보센터(ISEI)」, 「국립교육연구소(NIER)」

- 일본과 매년 상호 교환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학술연구 토론회를 가졌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현재는 일시 중지된 상태임.
- 상호정보와 자료교환

②독일의 「게오르크－에켈트 연구소」와의 협력

- 1993년 이후 상호 교환방문하면서 학술연구 토론회를 갖고, 교과서 시정활동에 공조할 것을 확인함.

③중국의 「인민교육출판사」, 「상해교육출판사」

- 1993년 국교수립이후 매년 교과서 문제를 협의함.
- 한국의 최신자료 이용, 한국의 발전상 소개, 한국의 독자적 문화 소개

④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 긴밀한 연계하에 자료배포 및 자료수집 등에 협력하고 있다.
- 한국소개내용 시정 사업에 협조

⑤미국 칼럼비아대학 한국학 연구소와의 협력

- 소장인 Stephen Linton교수와의 협조

3) 현재까지 연구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왜곡 내용

한국에서의 조직적인 외국 교과서 연구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이 원인이 되어 1982년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종류가 다양하고, 의식의 불변, 해당국 정부의 간섭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아직도 왜곡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도 일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 비슷한 유형의 왜곡이 상당수 있다.

교과서 내용의 시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학계의 확인과 동의 및 수정작업을 위한 시간적 문제, 자료공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한국 관련 내용의 왜곡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일본

- 한국 역사의 시작을 ‘한사군’으로 설정하여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 漢族의 지배가 붕괴되어 백제, 신라가 국가를 이룬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임진왜란의 구실로 삼고 있다.

- 청일전쟁의 결과로 조선이 독립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일제시대의 토지약탈 및 황국 신민화 정책의 내용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징용, 징병, 위안부, 창씨개명 등의 사실을 축소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

- 관동대지진 당시의 在日 한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 일제 통치기간에 일본은 한국의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전쟁(6.25)의 정확한 원인(남침사실)에 대한 기술을 회피하고 있다.

- 渡來人の 절대 다수는 韓國人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많이 포함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 독도를 일본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중국

-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성격을 중심으로하여 노예제, 봉건제로 구분하고 있다.

- 중국의 한국전쟁 참가를 기술하는 가운데, 전쟁의 발발원인을 미국이 주도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제 강점하의 한국 독립운동을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미국

- A.D. 100년경 한(漢) 제국의 영역을 지도로 제시하면서, 낙랑의 위치를 북위 38도선 위의 모든 지역으로 그리고 있다.

- 688년까지 중국(당)은 그 영향력을 한국 전역으로 확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임진왜란을 기술하면서 일본침략에 대항한 조선의 입장은 무시하고, 당시 조선에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 한국사의 특징을 ‘중국과 일본의 다리 역할’로 설명하여 한국사의 주체성, 자주성을 무시하였다.

- 조선시대를 설명하면서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일제 식민주의 사관의 용어인 ‘李 왕조’

를 표기하고 있다.

④러시아

- 한국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남한의 꼭두각시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얻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 5.16 군사혁명 이후의 미국과 한국 정부(전시 정부)와의 관계를 제국주의 지배자와 그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
- 청·일 전쟁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중국이 조선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1905~1910년 사이의 의병 활동을 러시아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조직된 '빨치산'으로 기술하고 있다.
- 일본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소련군이 가져다 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분단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⑤멕시코

- 산업 국가로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 국가로 남한과 이스라엘을 꼽고 있다.
- 부산의 명칭이 '부손(Puson)'으로 기술되어 있다.
-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모델에 의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여,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오기하고 있다.

⑥아르헨티나

-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 아닌 '청진'으로 표기한 책도 있다.
- 한국이 일본 문화권과 중국 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 북한을 온난한 대서양 기후, 남한을 건기가 없는 아열대 기후로 기술하고 있다.

⑦우루과이

- 한국의 역사에서 독립 국가로의 소개보다는 중국의 속국으로 기술하였다.
- 만주 일부, 중국의 북경, 천진 지역은 산업화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남한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경제 활동 방향에 의한 사회 유형에서, 한국을 농업이 우세한 혼합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⑧독일

- 한국을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⑨폴란드

-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체성을 강조하기 보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으로 활발히 전개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 한반도에서 두 강대국의 철수를 주장했지만 미국이 거절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국인은 주당 60시간씩 일하며, 하루 교대로 침대 하나에 3명씩 잔다.
- 한국에서는 두 개의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⑩체코

- 한국인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리고 유엔의 간섭으로 1945년5월 한반도의 남쪽지역에서만 선거가 있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헌법에 따라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간주된다.
- 남한 경제는 군사 관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노동자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며, 여성과 15세 이하 아동의 임금에 차별이 있다. 인력의 해외 송출로 인구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⑪루마니아

- 13세기 중반에 몽고 침략으로 멸망했던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 당 제국 지배하에 백제가 멸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 자연스런 민주주의 법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신념을 근거없는 이상일 뿐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⑫헝가리

- 1637년에는 민주주의 공국(公國)이 되었다.
-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활동은 가족주의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한국인의 웃음은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4)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내용 시정 사업의 성과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내용 시정사업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라야 한다. 1982년 이래 15년여에 걸친 사업 수행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일본 교과서의 한국관련 왜곡내용의 변화

종래 일본 교과서의 왜곡내용들이 다수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세계가 교과서 모두가 일시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검토작업과 시정촉구가 필요하다.

(시정된 예)

- 임나일본부설→많은 책에서 삭제되고 있음.
- 중국의 고대문명이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전달→고대 조선의 도래인들에 의해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짐
- 진출(임진왜란)→많은 책에서 '침략'으로 서술
- 한국청년 안중근이 이등박문 암살→'애국자 안중근 이등박문 사살'로 변화
- 구교과서에 없던 일제 강점기의 인적, 물적 수탈상(황민화 정책, 징병과 위안부 문제 포함)→강요에 의해 행해졌음을 기술
-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날조된 루머에 의한 학살이었음을 인정
- 한일합방(정당성, 합법성의 표현)→'식민지였다.'(침략에 의한 것)
- 구교과서 국호표기 '북부', '남부'→'한국', '북조선'으로 표기
- 오늘날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취업차별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
- 구교과서에 없던 원폭투하 당시 재일동포들도 다수 피해를 입은 사실소개
- 한글은 독자적인 표음문자로 창제된 문자임을 소개
- 많은 신교과서에서 한국의 공업발전상을 서술함.

②중국은 한국측의 시정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

중국측은 1993년부터 교육 교류단이 상호 방문하면서 매년 교과서 개선 연구 토론회를 가져 6회째에 이르고 있다. 수교 이후 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북한편향 일변도의 시각이 많이 누그러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도 변하여, 전쟁의 원인을 북침으로 주장했던 설을 완화시켜, "남·북간에 전쟁을 하였다."고 중립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시각이 전환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회주의적 사관과 이념적 판단은 잔존하

고 있다.

중국의 교과서 개발 및 검정, 보급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최근('96.7.3. 북경 세미나) 한국측의 시정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를 '노예제 국가'로 서술한 내용에서 '노예제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중국군의 한국전쟁참전에 관한 그들의 변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에 대하여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여 국가를 보위함)'했다고 한 것을 '북한의 원조 요청에 의한' 참전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의 교과서에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상해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한국 소개 내용을 증가시켰고, 애국지사의 활동상, 한국의 경제발전상 등 한국 역사에 상당히 호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화의 예)

- '남한에서 북한을 먼저 공격하였다.'→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 '남조선'→'대한민국(한국)'(1993, 인민교육출판사, 초급중학 세계지리 上)
- '남조선 최대의 도시' 서술→'한국의 수도' 서술(1993, 인민교육출판사 上同)

③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서술, 보완

미국 교과서에 70년대 이후의 한국 발전상에 대한 내용의 수정, 보완작업이 다수 이루어졌다. 주요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의 실상 즉, 산업 현장을 촬영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강화하여 소개하였다.(Prentice-Hall, 출판사 1987)

한국을 독립적으로 소개한 경우가 적었으나 독립단원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한국 전쟁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으나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등 문화 내용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 발전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④러시아의 한국관련 내용 변화

최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있는 국가의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전쟁(6.25)을 이념 중립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종래의 북한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의 11학년 역사교과서에서 북침설이 사라졌다. 그리고

과거의 북한 위주의 서술 경향이 바뀌어, 남북한 관련 서술량이 형평을 이루고, 우리 나라(남한)의 경제 발전상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크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약속하는 한편, 교과서 간행 이전에 상호 교열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1995년 세미나)

⑤베트남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변화

베트남에서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과 의견교류를 통해 베트남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이 탈이념적으로 바뀌었고, 한국 관련내용이 긍정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하였고, 양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다.

- “남한은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내용 삭제됨.
- 이승만과 미국에 남·북분단의 책임을 묻고, 한국을 미국의 예속정부로 서술했던 내용 삭제
-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호칭
- 한국 경제, 교육발전상 소개

이상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교과서 시정 대상 국가 뿐 아니라, 그 밖의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도 교과서 개발 주무부서나 출판사, 집필자들에게 시정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꾸준히 확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李在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KEDI의 자체적인 발전방안 수립(1997) 후 1년이 경과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계획자체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그동안의 자구노력 실적과 향후 재원확보 계획은?

(답 변)

KEDI는 '97년 4/4분기에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때의 발전방안은 주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서의 기능 및 인력이 조정·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새로 수입하게 된 학교평가사업, 학점은행제운영사업, 교육통계조사사업 등에 관한 발전구상도 포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주로 인력구조 및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기초로 '97년말과 '98년초에 인력이 관 및 직종 신설,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고, 조직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인력을 감축운영하고 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등 초긴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EDI의 경우도 현재 '99년1월부터 시행할 경영혁신 방안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7년도의 발전방안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방안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문제는 KEDI, EBS 및 교육부가 합의한 바 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黃祐呂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수탁사업의 비율을 줄이고 기본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1998년 현재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연구사업의 과제 건수는 31건, 수탁과제 건수는 23건으로 올해의 경우 기본연구사업 건수가 수탁사업건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과제 이외에는 수탁사업으로 선정·수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원은 올해 중점 과제로서 국가 장기발전계획 및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국가정책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 교육개혁연구 등을 기본과제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연구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국가 연구지원방침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기본과제 선정의 경우 국가 교육 발전 및 학교현장 중심 교육실천전략 사업, 학점은행제 운영사업 및 교육조사통계사업, 한국바로알리기사업 등 국가 교육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사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수탁과제의 경우 연구경비의 최소지원으로 최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필수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기본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 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대한 KEDI의 육성 대책은?

(답 변)

1997년까지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하여 교육부, 공보처(프레스센터)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하여 왔으나, IMF 사태 발생, 공보처 해체 등으로 연구과제의 의뢰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원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인 4,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 하면서 정부 관련 부처 및 각계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정부의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자 하며, 본원의 예산과 인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薛 勳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입시제도 관련 연구실적

(답 변)

1.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의 개선 방향, 1979.
2. 입시제도 비교 연구, 1980.
3. 대학 입학 시험제도의 개선 방안, 1981.
4. 고등학교 내신제도의 발전 방향, 1982.
5. 학생 선발제도의 개선 방향 탐색, 1983.
6. 재수생 증가 요인과 실태 분석, 1985.
7.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 1990.
8.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I), 1990.
9.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II), 1990.
10.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 : 학교교육과 선발제도 편, 1992.
11. 대학 수험능력시험의 발전 방안, 1995.

(질 의)
선진국 교육개혁의 성공사례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성과

(답 변)

○현재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개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선진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본원이 수행하여온 선진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개혁의 국제 지역 연구』 1998
- 『선진국 교육 개혁의 최근 동향』 1998
- 『세계의 교육』 1998
- 『교원 인사 제도 국제 비교 연구』 1997

『교육개혁 국제 학술 대회』 1997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1994

『교육개혁 국제 비교』 1994

○외국의 교육 개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 국 : 학교 현장의 유능한 교원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국가 전문교직기준 위원회 설치, 교원 충원센터 설치, 테크놀로지 교부금 프로그램, 21세기 교사 이니셔티브 운영

-프랑스 : 진로 교육개혁 : 진로정보·지도 센터 설치, 교사양성제도 : 교사교육 대학원 운영 교원선발제도 : 아그레가시옹

-독 일 : 중등학교 개혁 :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 직업학교 개혁 대학 교원 제도 개혁

-일 본 : 초·중등 학제 및 교육과정 개혁 : 학교 주5일제 실시, 단위제학교, 종합학과 학교교육과정 개선 고등 교육 개혁 : 대학의 자기점검, 자기평가, 대학원 대학, 학위수여 기구 설치.

-중 국 : 대학교육의 개혁 : 211공정, 대학의 구조조정 교원양성제도 : 교사초빙제와 성과급제의 실시

○현재 본원에서는 신정부의 교육개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국제지역연구, 대학원 학위제도 국제비교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咸鍾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OECD의 분류에 따른 교육지표 개발사업의 현황과 조기 완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OECD의 국제교육지표 사업(INES :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은 199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업목표는 ①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교육체계의 진단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 ②회원국의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③UNESCO, EU, IEA 등과의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1)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

e : OECD Indicators) 발간, 2) OECD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제교육표준분류(ISECD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개정안의 시행, 4) Network 사업 및 지표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의 대표적인 주요 추진활동을 보면, 1) 교육통계 및 지표의 기술그룹(OECD-INES Technical Group) 활동 및 회의 참석, 2) OECD 교육통계지표(Educational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사업참여를 위한 한국 교육통계 자료의 제공, 3) 사출된 지표자료의 확인 및 수정, 4) Network-C : 교육의 과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도에 수행될 제7판 OECD 교육지표(Educational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0) 발간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OECD 교육지표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Network 사업에 있어서도 OECD 교육지표에 수록되지 못한 한국자료의 개발을 위해 Network-B, Network-C 사업 참여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따라서 OECD/INES 사업은 목표년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OECD의 교육부문에 있어 가장 실효성있는 계속사업으로 한국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 의)

2002년 이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가?

(답 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2년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선 연구'로서 학생부 중심의 입시제도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 교육내용, 교수방법, 학생-교사간의 관계, 학교교육활동 등에 대해 중점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유형별 특성화 교육 등 '열린교육'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鄭喜卿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연구직원의 1인당 과제수행 수가 많다고 본다. 이로 인해 질적 수월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기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본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본원에 의뢰되는 수탁과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의뢰되는 시점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별로 균등하게 과제를 배치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는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보통의 경우보다 수탁연구과제가 많았던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본원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동일시점에서 다수의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6개 과제까지 수행하는 연구원이 있다는 사례는 연간 수행된 단기·중기 과제수를 모두 합하였을 경우이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

다. 향후 연구원이 다수의 수탁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가급적 지양하겠으며, 외부전문가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교육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부가 KEDI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KED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그러한 교육부 및 교육현장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전문기관으로서 향후 교육정책연구결과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정책수립에 직결시키기 위하여 교육부 등 교육정책당국과 보다 긴밀하게 교육정책의 연구·개발체제를 탐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李源馥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사립학교를 암묵적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변)

사립학교가 매매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교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매매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등 사학운영 체제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관할청의 감독을 더 충실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법인의 재산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 졸업생 등의 이사회 참여 폭을 넓히고
- 법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감독청의 감독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 의)
 수도권 교육집중이 교육의 문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귀 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 변)

먼저,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 원칙으로는 우선, 경직된 대학체제를 탄력성있고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대학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는 등 세 가지 큰 원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공단위를 재조정하여 대학내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조직 운영의 중복성을 피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전공단위를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2. 대학교수들의 경쟁적인 교육·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수임용제도와 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3. 대학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학간 혹은 대학내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4.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산업체의 인력수요 등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실용성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산업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향토 산업과 연계 속에서 관련 학과를 육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재등용에 있어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별 인재할당제의 실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과 지방자치 단체의 인재등용에 있어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거점 대학에 대해 중점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지방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방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대학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중앙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기능 및 역할의 일부를 지방대학으로 이전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질 의)
 고등학교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원에서고등학교 체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 의)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교육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는 어떠한 교육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오늘의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교육부문의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획일적 교육과 단편적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력, 상화주도력, 창의력을 기르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도덕적 양심과 법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넷째,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교육개혁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양심적인 국민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창의성 개발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도덕성과 민주시민교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입시제도를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방법을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유능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양적인 확대를 조정하고 질적인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질 의)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은?

(답 변)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학 운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사학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의사결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와 교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컨대 교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교무회의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곧 사립대학 경영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교무회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사회에 있어서는 그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것이 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무회의는 현재 법정기구가 아니나, 이를 법정기구화하여 학사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金許男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연구원은 결원이 심하고, 관리직은 정원을 유지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답 변)

교육개발원은 '97년도에 교육부의 산하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의 인력 57명을 이관시켰습니다. 이 인력의 90% 이상이 연구직이었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게 되었으며, '98년도초에 연구인력의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고 인건비의 압박이 예상되어 이관된 인력만큼의 연구직원을 충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연구원의 이직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원은 연구인력 대비 관리인력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비율의 적정화(전체 인력 중 연구직의 비율을 70%이상으로 유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학교교육의 효과 분석 연구에서 「인성의 변화」에 대하여 보충설명

(답 변)

인성과 민주시민성을 측정하는 23개 영역 가운데서 “환경보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익(公益) 중시, 사회봉사활동, 정치비판의식, 현재의 남녀평등 실현도에 대한 평가, 국제사회에의 관심과 참여(국제화 mind)” 등 7개 영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영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합리적 소비생활, 세대차이 인식, 공공질서 준수, 남아선호사상, 남녀평등의식”과 같은 5개 영역의 반응결과를 보면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같은 대표적인 민주시민성 영역에서 학교교육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질서 준수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덕목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원에서 수행한 인성교육 관련 연구보고서가 부족한 관계로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1부 제출합니다.

(질 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설립 취지,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답 변)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취지는 홍익인간 이념을 한국적 교육전통에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한국교육의 목표인 '지·덕·체'에 기반하여 당면 교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종합적인 정책연구 개발, 학교현장 지원사업, 교육통계조사사업, 학점은행 운영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체험화 방법'에 바탕한 정책방안제시, 문헌조사, 현장사례조사, 통계분석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盧武鉉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인성교육,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출요망
- 환경교육·성교육에 관한 자료 제출요망
- 실업교육에 관한 자료요망

(답 변)
○본원에서 수행한 시민교육 보고서가 부족한 관계로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1부 제출합니다.

○환경교육 및 성교육, 실업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97년 본원으로부터 이관된 교육과정평가원 및 직업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으로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연구원의 고령화 문제

(답 변)
최근 기관의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령 연구원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고령연구원이 현재보다 감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초·중등학교 평가 기능을 KEDI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KEDI 입장

(답 변)
KEDI가 초·중등학교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의 10,333개 초·중·고등학교를 KEDI 연구진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평가위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훈련시켜 평가를 하도록 하여, KEDI는 학교평가를 총괄·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이 현재 소속학교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현장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수준에서 작성한 일관되고 정교한 기준에 의해, 전국적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심층적 평가가 되어야만 학교현장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 총체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평가의 기능은 '97년도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시 KEDI가 수행하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기능을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면서 KEDI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여된 것이나, 현재 이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가능한 빨리 이 기능이 KEDI에서 정착·수행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 의)
기본연구사업비가 적다. 이에 대한 예산 대책, 수탁사업이 없으면 KEDI 연구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변)
수탁사업비는 그 자체가 순수연구·사업비나, 기본연구사업비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기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수탁사업비가 많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이 없더라도 기본사업비로서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1과제당 3~4인의 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탁사업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그동안 교과서 개발사업, 2+1공고체제 학습자료개발 등이 20~3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98년 현재까지의 수탁사업규모는 15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 연구과제는 이 중 1/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연구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타 연구기관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연구사업비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탁사업의 경우는 그 예산자체가 수탁사업이 아닌 정부의 출연금으로 KEDI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방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 의)

수탁연구과제의 현황, 간접비 공제, 집행내용, 기타 공제금액

(답 변)

수탁연구과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의 감사요구자료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탁사업 간접비는 사업비에 따라 5~13% 적용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는 기본회계로 관리되며, 기관예산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비 수입자체가 기관의 예산편성이 자체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 몫에 해당되는 재원만큼은 출연금 규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기관자체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98년도의 간접비 수입은 1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承國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부 수탁과제는 과제를 준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적은 없었는가?

(답 변)

수탁과제를 크게 순수연구과제와 사업성 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순수연구과제는 위탁기관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성 과제의 경우는 위탁기관(주로 교육부)과 밀접하게 연계·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 사업 및 교육조사통계사업의 일부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 의)

사학의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사립학교를 한가지로 보는 추세와 사학 문제에 대한

KEDI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변)

○사학의 건학 이념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간 주도의 교육체제는 장려되어야 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의욕을 잘 활용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각각 균형있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 문제들은 의사결정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난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학교법인과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를 개방하고 학사심의기구를 법정화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학이 당면한 재정난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질 의)

수능시험개발은 KEDI에서 한 것인가?

(답 변)

수학능력시험은 과거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개발·추진한 것입니다.

1998년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은 이에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範珍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이 근로청소년들에게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 변)

1.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

1) 평생교육의 이념을 정착·확산시킴으로써 국민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됩니다.

-졸업생 : 16만1천54명 배출(1998.2.28. 현재)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으로 대학진학 기회부여(38,179명 : 졸업생의 23.7%)

2)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코자 하는 적극적 태도가 함양됩니다.

다.

3) 향후, 국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교육 복지사업입니다.

2. 운영상의 문제점

1) 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근무 기피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출석 수업 수당(교육청별로 다르게 지급 : 12,000~20,000원)이 정규 고등학교 휴일 근무수당(25,000원 이상)보다도 낮게 책정됩니다.

- 본교와 방통고 겸직으로 받는 각종 수당 및 급여에 누진세가 적용되어 별 소득이 없거나 불이익이 됩니다.

2) 일요일 근무 기피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일요일 출석수업 부담으로 생활 리듬이 파괴되므로 월요일 근무시 피곤함과 나태함 등 초래합니다.

- 종교적 활동 및 가정의 대소사에 불참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풍조입니다.

3. 개선방안

1) 출석 수업 수당을 휴일 수당(25,00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교육청별로 다르게 책정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함이 바람직함)하여야 합니다.

2) 겸직에서 받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어야 합니다.

3) 방통고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근무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질 의)

학점은행제 시범운영의 결과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의 호응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답 변)

학점은행제는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쳤거나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학점이 누적되면 정규대학과 똑같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1~2차 18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약 1,400여개 학습과목이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으나 현재 IMF체제로 평생교육수요가 다소 감소하고 있어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

하고 있음. 향후 12월달에 평가하여 내년 3월에 시작되는 3차 시범운영 학습과목은 직업기술교육분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임.

아직 시범운영이 금년 3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따라서 현재 시범운영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으나, 향후 몇십만명이 학점은행에 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내년에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부 예산(약 4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까지 학점은행제가 정착되어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될 것으로 기대함.

(질 의)

연구직원의 예산정원 보다 부족한 이유는?

(답 변)

김허남 위원의 질의와 동일함으로 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李相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KEDI의 위상, 교육부의 수동적 기관이라고 보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의견은?

(답 변)

교육정책 연구는 효과적인 교육정책 추진의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원과 교육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원이 자체적으로 개발·수행하는 연구로 우리 나라의 교육현상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부에서 의뢰하는 정책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본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추출·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원은 연구수행에 있어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본원의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예

- 일본 : 국립교육연구소(NIER), 러시아 : 교육아

카데미, 독일 : 맑스 프랑크 연구소 등

(질 의)

KEDI 연구결과의 활용, 정책에 반영된 사례

(답 변)

그동안 수행된 연구결과의 주요 활용사례 몇가지만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이후 열린교육에 관한 연구를 집중 수행하여 교육개혁위원회의 핵심이념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교육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6년 수행된 “새학교의 구상” 연구보고서에서의 제안에 따라,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정책이 채택,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4년 수행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6년 수행된 “학교통일교육 실천방안 연구”의 결과로 학교 현장에서 과외활동, 교과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실천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7년 수행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 연구”의 결과로 정부부처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4차 교육개혁안에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1998년부터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의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5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결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배분모형 수정, 정부의 학교운영비의 표준교육비의 수준 지원 정책 목표설정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질 의)

법, 질서, 예절을 가진 시민자질 육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민교육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실태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답 변)

학교교육은 바람직한 인성, 도덕성 및 민주시민성을 겸비한 인간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현실적으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지적

영역의 교육, 입학시험위주의 교육이 이러한 인간형성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변화로 인한 가정에서의 훈육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이를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올해 「학교교육 효과분석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가치관 및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23개 영역 등에서는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개 영역에서는 크든 적든 학교교육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회봉사 실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성인남녀 약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李在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KEDI의 입장

(답 변)

KEDI가 수행하는 연구, 적어도 기본연구사업에 관한 자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구기획심의회라는 자율협의조정기구를 통해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사업의 경우는 과제 자체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질 의)

기본연구과제 19개, 수탁연구과제 15개는 현장성이 없다. 일선교사들의 KEDI 존재이유 의심.

(답 변)

일선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준거에 의해 일선에서는 KEDI 연구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KEDI에서는 자료 개발보다

는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으며, 앞으로 이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서 현장의 실정과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는 현장성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소재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가 다시 현장에 투입·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 연구수행과정으로서 이 지적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연구보다 장기 전망하여 발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정책연구를 크게 분류하면 당면한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장기발전계획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연구 중에서 어느 유형의 연구가 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외면하는 것도 연구기관의 소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경우 그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로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시대상황을 반영한 연구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하에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수행해 왔으며, 최근의 예를 들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2020년까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제안하는 “한국교육비전 2020”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장기발전 전망하에 교육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발전 방향은?

(답 변)

과거 해외공보관, 정문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기관의 대표 9인이 모인 ‘대외홍보위원회’(의장－해외홍보관장)가 발족되어 연 1회의 조정 협의회가 있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할 무렵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보처는 해체되어 버렸으며, 이 ‘대외홍보위원회’는 호지부지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은 현재 교과서 분석과 시정자료집의 개발, 관계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최소한 8명(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교육학, 주요 언어권 전문인력 4인 포함) 내외의 인력과 연 10억 이상의 예산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될 때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직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의 여러 관계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수렴하는 동시에 연구중심체로서의 창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의 유사 전문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적과 기능을 능가할만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 본래의 고유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방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은 인식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 인사의 정도와 집행 방법, 사업의 성격, 방향 등이 가지 각색입니다. 따라서 연구중심 기능과 자료 개발 기능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두고, 자료 보급 및 교과서 수집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는 체제가 바람직합니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 주요국들에 대한 한국관 시정사업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인 동시에 우리 나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의 교과서 전문가들과의 교육교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교과서 분석을 통한, 그리고 적극적 교육교류 활동(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되, 주변 3국(중국, 일본, 러시아)을 핵으로 하고, 일정한 주기를 두며 기타 다른 국가들을 권역별, 언어권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변 3국은 매해 상호 교차적인 교육교류활동의 형식을 빌어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거기에 일정 기간을 주기로 잡고 사회주의권, 아랍어권, 서반아어권, 영미권 등 언어권 순서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 3국을 중심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기타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권, 유럽권(북유럽권, 서부유럽권, 남부유럽권, 동구권), 북미권, 남미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등의 순서를 밟아 주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피고 점검하며, 계속 추진해 가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질 의)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한 경위와 개선방안 및 '98년의 자체수입예산과 12월까지의 추정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 변)

○ 자체수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수입액보다 축소계상하여 정부출연금을 30억2,900만원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계산방법과 본원의 실제계산 내역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되었으며,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본원에서는 자체수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수탁용역 간접비 수입에 있어서 본원의 경우에는 수탁사업이 수입대체 경비사업의 성격으로 수입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잔액은 전액을 반납하고 있어 간접비 수입이 없는 정부보조금 사업인데, 이를 수탁용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수입액 전부를 자체 수탁용역 간접비 수입실적으로 20억7,344만원을 처리

- 수입이자중에서 퇴직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퇴직적립금 원본에 산입하고 수입이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자수입 총액을 수입이자 실적으로 처리하여 6억6,839만원의 차이 발생

- '94년도에 개발된 「유아인지 학습자료」의 출판물에 대한 인세수입 3억원은 당해연도 1회성 수입인 것을 3개년 평균치 실적을 계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2억원이 과다하게 자체수입실적으로 처리

○ '98년도의 자체수입 예산과 추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A)	실적(B)	증감(B-A)
• 수입용역 간접비	369	185	△184
• 출판물 판매수입	197	28	△169
• 수입이자	609	623	14
• 잡수입	13	10	△3
• 전기이월금	143	143	-
계	1,331	989	△342

(질 의)

「시설 및 장비유지비」와 「기타운영비」의 지출액이 급증한 원인과 경상운영비 절감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답 변)

○ 시설 및 장비유지비는 본원의 청사(3,797평) 유지를 위한 연료비, 건물 및 부속설비 유지보수비로써, '95년도 대비 '97년도 지출액이 1억286만원이 급증한 원인은 본원의 청사가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 및 부속설비가 노후되어 교체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특히 보일러 및 배관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검사시에 교체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97년도에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를 위한 공사비 9,800만원이 집행되어 지출액이 급증한 것입니다.

○ 기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각종수수료, 청소유지비, 예비군 및 보안운영 등의 경비로써, '95년 대비 '97년도에 지출액이 1억1,115만원이 급증한 원인은 청소, 정문경비, 숙직전담을 정규인력 14명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인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정규인력을 감원하고 민간 용역 전환에 따른 용역비 1억3,500만원이 집행되어 급증한 것입니다.

○ '98년도 경상운영비의 절감계획은 13%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서 1,824만원(예산액 : 1억4,562만원), 기타운영비에서 2,900만원(예산액 : 2억2,76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절약요인을 찾아내어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96년 감사원 서면삼사 관련 정원의 인력운영에 따른 방만한 인원 개선조치는?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정원의외로 경상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상용직 인력을 '95년 37명, '96년 28명, '97년 14명을 운영한 바 있으며, 상기 인력이 담당한 업무내용은 전화교환, 청사관리(청소), 식당종사, 정문 경비 및 숙직 전담 등이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상기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화교환업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청사관리(청소) 및 식당종사, 정문경비, 숙직전담 등의 업무는 외부용역화하여 '98년10월 현재 정원의외로 운영하는 상용인력을 모두 정리하였고 지적하신 정원의 인력운영으로 인한 방만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정하였습니다.

(黃祐呂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 신분보장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현재 본원의 연구원 보장대책은 안정된 연구여건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원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원 급여수준은 감사원의 「'97 기관운영실태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급여비교표」에 따르면,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7번째로서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경제 분야 일부 연구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수준 및 처우수준으로 인하여 본원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직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연구원에 비하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전문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적극 고려하여 처우수준을 유사출연연구기관의 수준만큼 대우하여야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일 연구회에 소속되는 출연연구기관의 보수 및 처우수준의 격차에 의해 연구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의 극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방안으로 본원 자체적으로는 임금인

상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 즉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유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관계 제도를 개선·연구하여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질 의)

교육재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시급

(답 변)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는 과거 몇 차례 수행된 바 있습니다. 1986년의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화 방안 연구' 1989년의 '한국 교육투자 정책의 진단', 1991년의 '학교재정 운영 개선 방안', 그리고 1997년의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등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998년에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 때, 교육재정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 재정의 재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교육개발원의 위상 강화 방안은?

(답 변)

○본원의 재정은 '98년도의 경우 정부출연금(83%)과 자체수입(17%)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1) 기관의 위상 제고

- 명실공히 한국 교육문제의 예측, 진단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정책 연구의 본산으로서 교육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지원하는 Think-Tank의 역할 수행
-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방안의 창출 등을 비롯하여 실천주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교육부와 교육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부 산하 연구·지원기관들의 구심축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교육연구 협력을 주도하는 교육부문의 대표적인 NGO 기능 수행

(2) 연구의 정체성 확립

- 교육소비자인 현장의 연구수요를 수렴·반영하는 비중있는 연구과제를 개발·수행
- 사안에 따른 일회성,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KEDI 모형" 등을 개발·추진하여 KEDI 연구의 자생력 확보
-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및 "KEDI 모형" 등의 기본 연구 사업과 수탁사업 등 주문 생산 연구와의 균형 유지

(3) 연구사업의 질 향상을 통한 기관 공신력 제고

- "다품종 양산체제"의 연구에서 벗어나 밀도 있고 질높은 연구 수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기관 공신력 제고
- 규범적·기술적인 형태의 연구에서 보다 과학적·실증적인 연구를 지향

(威鍾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교단위 교원조직 개편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답 변)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단위의 교원노조 등에 관한 연구는 아니며,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원들이 교과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조직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향후 학교단위 교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 및 협의조직(교과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특히 고등학교에서).
- 교과별 이동수업이 확대되고 학생 개인별 선택이 대폭 증가되는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비추어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담임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특히 중학교의 경우).
- 현재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아울러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

기 위한 업무의 전문화와 학교내의 행정 간소화를 지향해야 한다.

- 교원간의 업무분담을 적정화하여 일부 교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부를 제출합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韓國教育放送院長 朴興壽

(鄭喜卿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위성교육방송을 폐지하거나, 사회교육방송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답 변)

위성교육방송은 당초 출범 당시 사교육비 절감이 주된 실시 배경이었던 관계로, 「과외방송」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성교육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단순히 과외 프로그램만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제작 내용에 있어서도 학원 강의식 과외 성격 위주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교육보완」입니다. 또한 대입제도의 변화로 교육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위성교육방송은 난시청 지역의 완전해소로 농·어촌·도시·벽지·저소득계층 학생에게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사회 실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따라서 위성교육방송의 현재의 학교교육 보완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등 향후 다음과 같이 위성교육방송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성교육방송의 정체성을 기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편성방향을 재정립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대학입학제도의 변화와 학교 교육 현장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 재교육, 교육개혁 실천 방안 및 교과지도방안 등 교사 대상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 편성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의 보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의 교과서와 칠판으로 일관하는 경직된 교실에 역동적이고 생생한 방송매체가 투입되어 살아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일방향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 98년 2학기부터 방송 직후 질의 응답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의)

교육방송이 학교교육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초·중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 프로그램을 다량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1. '학교교육보완'은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풍부화, 규정화된 학년별 교과목 내용의 지도라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탈피, 교육과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extra curriculum 운영 등의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방송은 이와 같은 EBS의 학교교육 보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초등학교 교육방송 커리큘럼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99년에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춘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을 사전기획·제작할 계획입니다.
3. 99년에 1단계로 기획 제작되는 학교방송 프로그램은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학년별 통합교과 프로그램, 교과별 통합학년 프로그램 등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자료형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될 것입니다.
4. 2000년에는 초등학교 대상 및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기획·제작할 것입니다.
5. 초·중학교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는 현장 교사는 물론 학계 전문가도 다수 참여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교육방송 TV 프로그램 중 사회교육 방송 편성비율이 63.2%로 초·중·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인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향후 대책은?

(답 변)

1.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학교방송 프로그램'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등을 비롯해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문화소양교육 등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교육방송은 이런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비율을 지금까지 늘려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지상파 TV는 사회교육 전문채널, 위성 1TV는 초·중등생 대상으로 학교방송채널, 위성 2TV는 고등학생 대상의 학교방송채널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3.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작비 150억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교육방송은 재원을 확충하여 지상파 1TV를 명실상부한 사회교육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金許男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답 변)

1.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지원 실적은 '97년 2,363,000만원 '98년 1,939,500만원이며, 99년 계획은 1,335,400만원으로 '98년 대비 31%가 삭감됨.
2. 국가 수행사업인 교육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출연금 외에 수신료, 공익자금(방송발전자금) 등의 공공재원의 확고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3. 교육방송 자체적으로는 교재인세의 지속적 확대, 교육방송 관련 제작협찬, 광고사업부문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함께 병행 추진
4.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익사업의 활성화 외에 인터넷 사업 ARS 서비스 등 신규재원을 계속 발굴코자 함.

(질 의)

'98년도 중등학교 교육방송 활용학교가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이유와 대책은?

(답 변)

○'97년8월25일 위성교육방송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중·고등학교에서는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였으나,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호기심이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의 보충학습시간과 방송시간이 중복되어 방송시청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프로그램 수준이 중·상위권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활용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방송교재 수준은 처음 실시하였

을 때 보다 내용이나 체제면에서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위성교육방송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문제풀이 중심에서 벗어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체제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시청도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학년도 대학무시험전형제도에 맞추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적성과 소질,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비 교과프로그램도 방송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질 의)

공사전환과 관련한 예산확보방안을 TV수신료 인상으로 잡고 있는데 수신료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 변)

1.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국민부담이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함.
2. 그러나 현재 KBS가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2002년 월드컵에 맞추어 HDTV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교육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인 바, 지금까지 교육방송은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 자체 노력만으로 국민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
4. 따라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청사확보문제에 대하여

(답 변)

- '90.12.27.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으로 출범한 이후부터 '97.3.12. 한국교육방송원 설립시까지 교육방송 청사 신축을 위해 서울시내 및 근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각종 제약으로 부적합 결론에 도달함.
- 이에 따라 KEDI와 EBS간에 KEDI 부지내에 청사를 신축기로 합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사신축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IMF

상황에 따라 국고지원 확보 난항으로 현재 담보 상태임.

- 청사문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책으로 KEDI 구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2개 기관이 공존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으나,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현 KEDI 건물을 단독 인수 또는 외부 부지를 물색하여 단독 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함.

(金日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방송 위상과 관련하여 교육방송과 타 공영방송과의 역할조정문제 및 통합 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방송발전자금의 지원배정과 TV수신료 할애 문제에 대한 EBS의 입장과 추진방안

(답 변)

- 교육방송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타 공영방송과 철저히 차별화되고 있음.
 - 교육방송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 즉 target audience가 매우 세분되어 있어 시청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이 다양성을 기본으로 함.
 - 교육방송은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는 일반 방송의 편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기준 역시 프로그램 목표, 내용, 방법 차원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
 - 교육방송이 시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령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 교육·문화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등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음.
- 따라서 21세기의 교육환경 변화는 교육환경과 교육제도의 개방적·탄력적 운영, 평생 교육차원의 계속교육 강화 등 21세기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송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이 국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배분과 방송발전자금의 배분이 필수적이며 또 타당함.
- TV 수신료

- 현재 공영방송의 재원인 TV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중의 일정비율(20%)을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에 배분
- TV수신료는 KBS가 아닌 제3의 기관(예 : 통합방송위원회)이 관리 주체가 되어 교육방송에 수신료를 배분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현행대로 KBS가 수신료를 계속 관리할 경우,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하여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명시

○ 방송발전자금

- 통합방송법 제정시 방송발전자금(공익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교육방송을 최우선 지원 대상 기관으로 명시→여당 방송법안에 기 반영
- 법시행령에서 교육방송에 대한 발전자금의 배분 비율을 명시

(질 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좀더 세분화시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 변)

-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의 경우 3단계(기초, 중급, 고급)로, 중학생의 경우 2단계(일반, 심화)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학생들도 교육방송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의 수준별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좀더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요구도 있기는 하나 채널 및 방송시간의 한계로 더 이상의 세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의 이해 능력에 따른 수준별 프로그램의 개발 계속 및 차별화된 교수법 적용 노력을 계속하고,
 - 방송의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질의 응답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을 계속하며,
 - 학생들의 시청 반응을 조사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현재 우리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과제는?

(답 변)

현재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및 학생의 정보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정보 활용 능력 및 이를 이용한 교수 활동의 개선을 교육정보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원 양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대·사대 등에서의 정보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원의 정보소양 인종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현직교사 연수 등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 정보통신 환경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98년8월 현재 전체 학교의 약10%(1,082개교)밖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78%)이 저속(128KB 이하)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고속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셋째, 교육용 콘텐츠의 확보·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는 개별학습용 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비디오 자료 등 각 교과에 맞는 수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민간 개발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가 확보되지 못하는 점과 교사들에 의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교육정보 자료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로는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 지원과 직접 참여, 저작권을 비롯한 교육정보 자료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교육정보 자료의 구입 예산의 책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용 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용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사이버교육 마켓 구축이 요망됩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이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국가기반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확충 예산을 하드웨어 공급 예산의 40%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입니다. 교육용 콘텐츠에 포함되는 애니메이션, 음성, 동화상 등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한편, 방송사 등 국내의 각종 전문기관은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료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자화하거나 교육용 콘텐츠 제작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갖는 원자료들을 중복하여 제작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바, 원자료 보유기관과 교육용 콘텐츠 제작기관간의 자료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에듀넷(교육정보망)의 운영 체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에듀넷의 운영에 있어 운영 재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은 통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증가와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에 따라 시스템 및 통신망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적절한 시스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에듀넷은 현재 서울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의 사용자들에게 과다한 통신료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 자원의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듀넷 통신 부하의 중앙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에듀넷 분산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용 정보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국가차원으로 교육용 기기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구성·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용 정보기기에 대한 상설 품질 인증 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용 정보기기의 성능, 신뢰성, 안정성 및 호환성 등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각종 교육용 정보기기들이 보급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각

종 유지 보수 활동을 위하여 교육용 정보기기에 대한 지역별 유지 보수 및 활용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교육용 정보기기의 생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과별 전용 교실을 확보하고, 이동수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단선진화 시설을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 교실에 설치된 기기마다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가공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현재와 같은 수업체제하에서는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과별 전용 교실을 지정하고, 지정된 교실은 해당 교과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사전에 정의된 수업 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한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해당 수업 시간에 맞춰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콘텐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전문화·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95.8)'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분야를 분명히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범 국가적인 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분야를 분명히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범 국가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가차원에서 산·학·연·민·관이 교육정보화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교육정보화 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黃祐呂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교현장에서 위성방송으로 보충수업 등을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급별로 조사한 내용

(답 변)

○'98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위성교육방송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의 활용률이 1학기에는 39.8%, 2학기에는 43.2%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보충학습시간의 활용률이 1학기 68.0%, 2학

기 45.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방과후 보충학습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학기 86.3%, 2학기 67.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초·중학교에서는 평균 40%이상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평균 70%의 활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 의)
위성 교육방송 실시의 근본적 목적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데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위성 교육방송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원장의 견해

(답 변)

-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나 그룹과외, 학원수강 등과 같은 사교육비의 팽창은 공교육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 경제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과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학생들과의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부에서는 과열과외로 인한 공교육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는 과외망국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교단 선진화 작업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달는 과열과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위성을 이용한 교육방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결국 위성교육방송을 통하여 우선 단기적으로 과열과외를 완화함으로써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해 보고자 함이 위성교육방송의 근본 목적입니다.

(질 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작한 현재의 위성교육방송의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EBS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작한 위성교육방송을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과외 채널에서 학교교육 보완 채널로 운영 목표를 바꾸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먼저 위성교육방송의 정체성을 기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편성 방향을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대학입학제도의 변화와 학교교육 현장의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 재교육, 교육개혁 실천 방안 및 교과 지도방안 증 교사 대상 프로그램도 대폭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현재의 학교교육은 오랜 동안의 입시제도에 이끌려 다니면서 객관식 위주의 시험준비교육에 치우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현장에 위성교육방송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수업방식으로는 바뀌는 대학입시 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교육방송이 입시대비 위주의 과외방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보충 보완의 기능이 강화될 때 근원적인 과외 해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본래의 교육방송 기능이 회복됨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의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매체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에 비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수년 전의 교과서와 칠판으로 일관하는 경직된 교실에 역동적이고 생생한 방송매체가 투입되어 살아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교실수업으로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봉사활동, 독서지도, 예술감상, 창의력교육, 현장답사 등 비교과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수용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높은 교육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교육적 요구와 맞지 않을 때 기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용자의 요구와 시청 행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편성정책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현장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니다.

(질 의)

교육방송의 원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방송의 위상은?

(답 변)

- 교육방송이 시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령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 교육·문화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등 전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학교교육 중도 탈락자,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학교교육 미수혜자, 재소자 등 교육소외집단에 대한 교육적 기능은 교육방송 이외에는 담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교육방송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 즉 target audience가 매우 세분되어 있어 시청 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이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며 프로그램 제작기준 역시 프로그램 목표, 내용, 방법, 차원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방송전문성과 교육전문성을 함께 갖춘 전문가집단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송영역이며 교육방송은 지난 20여년간 전문성을 축적해온 국내 유일의 교육방송 전문인 집단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 교육방송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부출연기관의 형태로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재원구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 의)

교육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방안은?

(답 변)

- EBS는 사업다각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증대 노력의 결과로 91년 대비 97년 세입이 455% 증가, 자체수입비율은 26.3%에서 67.3%로 괄목할 성장
- 그러나 경제침체로 재정자립은 어려운 상태
 - 98년 경우 정부출연금의 전년대비 18.1%(42억 9,000만)가 삭감되고 자체수입도 97년에 비해 대폭 감소예상

- 99년도에는 출연금의 대폭삭감('98 : 194억 → 133억원) 및 교재인세수입, 상업광고 수입격감이 예상되어 98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3억원으로는 TV3개, Radio 1개 채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 교육방송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키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공사체제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공사체제 운영에는 약 1천억원의 운영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학교방송비용 200억원은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 및 수신료 약 600억원, 자체수입으로 약 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중입니다.
- 이를 위해 EBS 경영진은 최대 노력중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薛 勳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방안

(답 변)

- EBS는 사업다각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증대 노력의 결과로 91년 대비 97년 세입이 455% 증가, 자체수입비율은 26.3%에서 67.3%로 괄목한 성장
- 그러나 경제침체로 재정자립은 어려운 상태
 - 98년 경우 정부출연금의 전년대비 18.1%(42억 9,000만)가 삭감되고 자체수입도 97년에 비해 대폭 감소예상
 - 99년도에는 출연금의 대폭삭감('98 : 194억 → 133억원) 및 교재인세수입, 상업광고 수입격감이 예상되어 98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3억원으로는 TV3개, Radio 1개 채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 교육방송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키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공사체제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공사체제 운영에는 약 1천억원의 운영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학교방송비용 200억원은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 및 수신료 약 600억원, 자체수입으로 약 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중입니다.
- 이를 위해 EBS 경영진은 최대 노력중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 의)

각 시·도 교육청 중 사이버 연수원의 구축현

황 및 이의 확대 구축을 위한 센터의 계획과 대책?

(답 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약 34만명으 교사 중 매년 10만명 정도가 각종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체제 이후 1999년에 각 시·도 교원연수원의 운영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일반 연수 과정이 상당 규모로 축소되어 연수 수요를 충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핵심이 되는 교사들에 대한 각종 연수 기회의 축소는 교육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교원연수원은 인터넷의 웹 환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를 사이버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 체제를 말합니다. 사이버 교원연수원을 통하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원 연수 실시로 연구 기회가 확대되고, 연수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등의 연수 비용이 절감되며, 연수 기관의 조직, 연수 현황, 연수 이수자에 대한 자료 등도 즉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원 연수원은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원연수원, 65개 대학 부설 교원 연수원,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및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 별로 1개씩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8년11월 현재 전국의 사이버 교원연수원 구축 현황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경남교원연수원 등 총 3개 기관이 완성되었으며, 이 외에 현재 전북교원연수원과 이화여대 교원연수원에서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도 교원연수원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보류 또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본 센터는 원격연수를 추진하고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수 기관에는 연수종합관리시스템 및 원격연수용 코스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수 예산 삭감에 따른 교원의 연수 기회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사이버 교원연수원을 확대·보급하고,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며, 아울러 각종

원격연수 코스웨어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축된 연수종합관리시스템을 현장의 요구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연수체제 운영 및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본 사이버 교원 연수원이 조기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시·도 교원연수원 및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에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된 원격연수 코스웨어 17종 외에 새로운 코스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센터에서는 정보화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한국전산원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학교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과 학내 전산망이 구축된 학교간의 정보 교류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학교의 교육정보화를 위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보급되어 있으나, 이들 기자재를 학내 전산망으로 묶어 사용하지 않으면, 각각의 기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교육자료·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 이외에 통신회선 설치 등 학교의 구조와 사용방안 등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학내 전산망과 외부 통신망이 연계되어야 국·내외의 다른 학교나 기관과 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외부 통신망으로 국가초고속망이나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학교가 외부 통신망과 학내 전산망 연결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학교의 컴퓨터 수량에 비해 외부 통신망과 연결하는 회선의 용량이 작고 속도가 느려 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통신망은 학교 등 교육 수요자 이외의 다른 수많은 사용자가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이용자가 많아,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각종 교육자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고하고, 학교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학내전산망 모형 개발과 통신 장비 구입·설치 이외의 적정한 시설개조와 설치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고속 교육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해 학교, 가정, 일터 및 교육정보제공 기관이 상호 연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초고속 교육정보망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별 교육자료·정보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지역 교육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시급합니다.

(질 의)

에듀넷 이용자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듀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용시간 증가율도 높은 실정입니다.

에듀넷의 이용자는 '96년도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여 '98년도에는 약 70만명에 이를 것이며, 2002년경에는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에듀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망 및 시스템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통신망의 경우 2,400선을 '99년에는 5,200회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신회선과 서버는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적시에 증설되어 2002년까지는 서버 70대 이상, 통신회선을 35,000회선 이상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역에 관계없이 가정에서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에듀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용의 PC통신망(예 : 014XY망)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 같이 대량의 정보 유통이 필요한 기관을 묶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PC통신망과 초고속 통신망을 교육정보망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자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듀넷 이용자 증가와 제공하는 정보가 확대되면 될 수록 통신망 및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당 센터에서만 에듀넷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집권식 운영 체제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에듀넷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지역교육정보센터에서 시스템과 통신망을 관리 및 지역별 정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에듀넷 분산서비스 시스템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중앙 센터와 지역 센터간에는 초고속의 대용량 전용망으로 연계함으로써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용자들의 과다한 통신료 부담 문제와 접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소요재원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李相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에듀넷에 탑재되어 있는 교육용 S/W중 대부분이 도스용으로 되어 있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윈도우용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684편의 교육용 S/W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S/W는 도스용으로 제작되어 현재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금년부터 S/W들을 윈도우 95용으로 전환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 개발된 도스용 S/W를 윈도우용으로 전환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인력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활용성 및 멀티미디어화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기 개발된 S/W 684편 중 윈도우용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S/W는 400여편 정도이며, 금년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26편의 S/W를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만으로 위의 편수를 모두 재개발하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S/W의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활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되,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가 부족한 현장 학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학교에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학교에 한시적으로 교육용 S/W를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교육 정보망을 통해 교육용S/W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통신 환경하에서는 수MB이상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 전용선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교육용 S/W를 직접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금년 말부터 교육용 S/W를 CD로 제작해서 실비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이 성안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용 S/W를 자유로이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통신속도도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현안 사항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각급 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요금 또한 크게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 센터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범 정부적인 협력과 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인바, 이를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의)

전국 교육용 S/W공모전 입상작이 에듀넷의 웹서비스와 문자서비스에 분산 탑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기 위한 대책은?

(답 변)

현재 에듀넷은 문자서비스의 자료실과 웹서비스의 자료실이 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본 센터는 가칭 '교육용 S/W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는 금년 12월부터는 문자서비스와 웹서비스의 자료실이 동일한 자료로 통합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며, 이후에

는 이상과 같은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 의)

에듀넷에 개설된 온라인 학교가 다른 통신망에 개설된 온라인 학교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답 변)

'온라인 학교'라 함은 기존의 학교 체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시스템을 매개로 정보교환이나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의 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학교의 개설에 있어 에듀넷의 상용 통신망보다 적은 이유는 먼저 에듀넷의 운영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다른 통신망에 비하여 짧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천리안 : 13년, 나우누리 : 5년) 또 다른 이유는 상용 통신망이 온라인 학교를 개설할 경우,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나며 이는 곧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에듀넷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온라인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에듀넷의 웹서비스에는 학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된 학교수는 98년11월10일 현재 760개교(초등 : 264, 중학 : 184, 고등 : 3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온라인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학교별로 할당되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크게 증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학교가 개설되는 학교별로 계정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은 곧 시스템 증설과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학교 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연수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센터는 앞으로 보다 많은 학교에 온라인 학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朴承國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위성교육방송 실시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582억원 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답 변)

○ 위성교육방송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읍·면지역, 농·어촌, 도서·벽지 등의 지역에서 큰 활용이 있었습니다. 과외 해소라는 근원책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준별 학습을 함으로써 초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사교육비 절감액은 98년8월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한 EBS 위성방송 시청형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582억원으로 일차 보고 하였으나, 위성교육방송의 경제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방법을 다양화하였기에 다음을 최종 자료로 대체합니다.

- 기존의 사교육 수단과 위성교육방송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과외비가 줄지는 않았으나 위성방송의 활용으로 인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를 금액으로 환산 : 6,730억원

***산출근거**

타 사교육비 투입비용 대비 EBS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EBS와 타 사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중·고생 수를 곱해 연간 금액 산출
- 기존의 사교육수단과 위성교육방송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성교육방송을 활용한 이후에 실제로 절감된 비용 : 347억원

***산출근거**

국내 연간 사교육비 총액에 EBS 위성방송 활용률과 이용률, 위성방송 이용후 절감된 비율을 곱해 산출
- 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위성교육방송만을 활용함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 : 1,283억원

***산출근거**

EBS 위성방송의 사교육 혜택을 금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EBS는 활용하나 타 사교육은 이용하지 않는 중·고생 수를 곱해 연간 금액 산출
- 위성교육방송의 경제적 효과 : 8,360억원(6,730억원+347억원+1,283억원)

- 위성방송 개국시 사교육비 10조(10조 : 유아, 초등, 예·체능 포함)의 10%를 계획하였으나 지난 9월 실시된 시청형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5조1,154억원 중에서 8,360억원의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음.

(金日柱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방송이 사회교육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 교육방송은 앞으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살려 전국민의 교양과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내용으로 편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송의 대상 및 영역, 내용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교육기회가 균등히 배분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학습보조 및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뿐 아니라 폭넓은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질 의)
교육방송의 인력구성 형태의 타당성과 부족 인력 확보대책은?

○ 현재 교육방송 인력은 정원 528명, 현원 486명, 결원 42명(8.0%)으로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미충원된 상태입니다.

○ EBS가 국내방송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 심화에도 불구하고, 위성TV 2개 채널 신규운용을 위해 34명을 충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TV 방송시간 증가(주당 30시간분)등 인력증원요인을 자체 인력으로 흡수운영하였고, '97.3. 독립법인화 이후 지속적인 방송시간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교육방송의 인력구성 현황을 보면, 방송제작 현업 인력이 전체의 48.1%, 기술인력 31.4%, 기타 인력 20.7%로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송-기술 등”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방송사 인력 분포 현황(정원기준)>

구 분	총 원	임 원	방 송	기 술	행 정	기 타
KBS	3,744	11 (0.3)	1,472 (39.3)	972 (26.0)	495 (13.2)	794 (21.2)
MBC	1,676	10 (0.6)	642 (38.3)	374 (22.3)	350 (20.9)	300 (17.9)
SBS	1,387	10 (0.7)	457 (33.0)	252 (18.2)	297 (21.4)	371 (26.7)
EBS	528	2 (0.4)	254 (48.1)	166 (31.4)	58 (11.0)	48 (9.1)

※비교 : 1. '97년도 방송위원회 연차보고서 참조(본사기준)
2. EBS의 경우 방송직에 부원장, 연구직 포함.

○따라서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기준 인력의 소수정예화·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여 해소하는 한편으로, 일부 부서의 부족인력은 과감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외화프로그램 편성확대, 외주제작 및 재방송 확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부족 타개책으로 Outsourcing 및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장비동물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IMF 체제하에 학교교육 보완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 교육방송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인력운영 규모의 과도한 부족으로 인한 기본체제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및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획예산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증원 등의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黃祐呂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방송의 재방송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재방송대신 학교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그동안 일부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재방송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프로그램 활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상파TV의 재방송(재활용 프로그램 포함) 현황은 '98년 후반기의 경우 31.3%로써 전반기 35.2%에 비해 3.9% 감소된 상황입니다. 교육방송의 편성방침도 재방송 대신 학교교육 보완 및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양 프로그램 등을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국가적 상황에 따른 정부의 예산삭감 방침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작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당분간 현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 의)
교육방송의 재원구조가 지나치게 교재인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답 변)

1. 최근 교재인세 수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비 고
총 예 산	43,743	68,760	68,306	51,859	
교재인세수입 (구 성 비)	6,022 (13.8)	14,031 (20.4)	19,852 (29.1)	19,852 (38.3)	

2. 교육방송의 재원 구조 중 교재인세 수입은 자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98년까지 29%미만이었습니다.
3. 99년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대폭 삭감되어 전체 예산 중 '98년과 동일 액을 계상하였지만 교재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4. 99년 이후 교육방송 재원이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수신료, 공익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5. 협찬광고, 제작협찬 등 교재인세 외의 교육방송 관련 수익사업에도 기관차원의 자구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李源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사이버 대학을 국립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원만히 추진하려면 국립대와 멀티센터가 연합해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국립 초·중·고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사이버 대학 운영 형태는 일부 수업을 웹을 이용한 원격 수업 형태, 일부 대학의 가상 캠퍼스 운영, 원격교육 대학의 사이버 대학화, 새로운 사이버 대학의 설립 등과 같이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네 번째 형태로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형태의 사이버대학은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25개 대학이 사이버대학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강의를 웹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학교 강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이버 교육으로 기존의 교육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학점인증제 등)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분야별 교육을 검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학교로서의 기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립 사이버 학교의 설립에 관해서는 현재의 한국 방송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능을 개편·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러한 사이버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향후 전국적으로 다수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보통신망 기반인 에듀넷이 지금보다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듀넷과 교육전산망을 일원화하고 첨단학술정보센터와 저회 센터가 통합되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통합된 교육정보망은 지역교육정보센터와 연계·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 산간·벽지, 낙도에서도 초등·중등·고등교육에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李相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교에 각종 교육용 정보기기를 보급함에 있어 학교전산망을 우선 설치하고, 이에 앞서 학교 전산망에 대한 표준화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 변)

현재 교육용 컴퓨터 보급 사업과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각기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하드웨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이미 교육용 컴퓨터와 학내 전산망이 동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는 학내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 부터는 교육용 컴퓨터 및 교원용 컴퓨터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학내전산망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센터는 금년 초부터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통합 모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개발된 기본 규격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멀티미디어 교육용 컴퓨터, 네트워크, 교단 선진화용 기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현장에

배포하여 개발된 규격 안이 각급 학교에서 활용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보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